

노·사·정이 바리는 대학의 역할

대학 실직자 프로그램의 방향과 과제

윤 우 현

민주노총 정책국장



1. 대량실업 시기의 대학의 역할

최 근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통계상으로도 5월말 현재 실업자가 149만 명(6.9%)에 달하고 있고, 그 중 전직 실업자가 138만 명이나 된다. 물론 실제 실업률은 훨씬 높다. 민주노총이 국제기준에 따라 추계한 바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실망실업자 중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실업자는 126만 명, 정부 통계에 안 잡히는 일용직 완전실업자 65만 명, 사실상 실업자나 다름없는 주 18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38만 명 등이 추가될 경우 실제 실업자수는 400만여 명에 달한

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현 경제 상황이 애초에 정부와 IMF가 예상했던 각종 경제지표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률도 연말 5%로 예상했던 것이 이미 7%에 육박하고 있으며, 성장률도 연간 목표치인 -1%는커녕 2/4분기 현재 이미 -3.8%를 기록하고 있고 연말에는 -10%까지 예상되고 있다. 유일하게 외환보유고만 연말 목표치 41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도 그나마 필수 원자재 이외에는 수입이 거의 중단된 반면, 외자 도입이 늘어난 결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하반기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계기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여, 1999년에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건축-고금리를 축으로 하는 IMF식 처방은 상당 부분 실패하고 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이라는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이제 한국 사회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고 있다. 대량실업이라는 뇌관이 터지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고통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혁'을 단행하든지 양자택일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 은폐되어 왔던 기득권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고비용 거품구조(냉전구조, 재벌경제, 부패구조,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 구조, 절대빈곤 상태의 사회보장 수준 등)에 대해 전면적인 청산 및 개혁 조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나 남미의 어느 나라처럼 공동체 기반의 붕괴와 극도의 정치·경제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 사회가 별다른 사회적 안전망도 없고 그동안 종합실업대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직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 재취업 훈련은 보다 치밀한 준비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교육 훈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상 시국인 만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학의 인적·물적 재원을 전면 개방하여 실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으로 하여금 당면한 대량실업의 충격파를 흡수, 최소화하는 완충지대 혹은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절망감에 젖어 있는 실직자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야말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학은 능동적으로 '대량실업 시대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업자들의 교육훈련 수요'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및 미래형 지식경제의 정착에 필요한 산업인력 수요' 그리고 '생애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실직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방향과 대학의 과제

1) 실직자 위주의 주문식 프로그램 개발

현재 정부가 종합실업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실직자 교육훈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업자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주문식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교육훈련이 중간수요자인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주문식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오기는 했지만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최종 수요자인 재직 노동자 및 실직자들과 밀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량실업 아래서는 실직자와 밀착된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눈높이 실직자 훈련 프로그램'이 되지 않으면 공공취로 사업의 경우처럼 실직자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당장의 기업별 혹은 산업별 수요도 중요하지만 현재 일자리 창출 자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실직자들의 심리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해소하고 향후 일자리 확보의 전망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표〉 실직자의 소득계층별 실업대책 요구 사항

구 분	70만 원 미만	7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상	전 체
직업훈련 확대	16.7	23.0	20.1	13.9	16.1	18.3
직업소개 및 정보 확충	21.7	24.3	20.4	23.9	13.7	20.7
생계 보호 강화	25.4	25.7	27.4	26.1	39.1	28.5
새 일자리 창출	22.5	15.8	22.8	23.9	18.6	21.2
기업 고용 유지 노력 지원	12.3	10.5	8.7	11.1	10.6	10.2
기 타	-	-	0.3	-	0.6	0.2
무응답	1.4	0.7	0.3	1.1	1.2	0.8
계	100	100	100	100	99.9	99.9
총 응답수(명)	138	152	368	180	161	999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제공.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평생능력개발 체제를 갖춰 나가기 위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산업별 혹은 기업별 더 나아가 국가의 인적 자원 관리전략과 균형 있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표〉 참조).

이를 위해서는 실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 바우처(증빙 서류)'를 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대학 등 훈련기관들은 이와 연계된 '주문식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을 추진한다면, 이직자·실직자의 요구사항을 보다 폭넓고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문식 프로그램은 실업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광범위하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 대학이 화이트칼라, 전문기술직 등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것이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각 훈련기관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유익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교육훈련이 사회적 안전망

으로서의 기능까지 병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계가 많다. 한편, 일용직, 단순기능직, 임시직, 여성, 장애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인 능력개발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5개 분야(정보·통신, 창업 및 기업경영, 영상·예술·문화 산업, 유통·판매 등 마케팅, 건강 산업)에 국한하고 있는 대학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전 업종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실직자를 위한 열린 교육훈련체제 구축

현재 노동부, 교육부 등이 추진하고 있는 '실직자를 위한 대학·전문대학 시범 훈련사업'이나 '실직자 재취직 훈련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5천 명, 고용보험이 미적용되는 1만7천 명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실직자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대량실업' 하에서는 그 정도의 훈련은 별다른 의미가 없고 그저 생색 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산업인력 수요 차원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 확보

및 인력 투자 차원에서 실직자 교육훈련을 시행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최소한 향후 3년 동안은 국가 책임 아래 실업층의 20%에 대해 매년 3개월~12개월에 걸친 훈련 프로그램을 실직자가 직접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실직자가 어느 때나 원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훈련 체제'를 구축하는 데 대학이 앞장서야 하며, 이는 모든 대학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훈련 배우처 발행(50만 건 이상) 등에 필요한 재원은 세제 개혁(실업세 등 목적세 도입) 등을 통해 마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반 회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3) 실직자를 위한 교육훈련과 원스톱 서비스의 병행

실직자 교육훈련은 향후 경제전망과 관련된 전문적인 취업 설계를 기초로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먼저 한국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 위주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정착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전문 기술 편람'(예컨대, 1,000대 다품종 소량생산 품목 설정, 이와 관련된 벤처기업 지원대상 등)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관련 중소기업과 연계된 인력개발 체제(산학협동 체제 등 포함)를 갖춰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산업구조 변화나 경제의 서비스화 추세 등과 관련된 취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업 설계를 바탕으로 한 장기 프로그램과 함께, 틈새시장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를 실업자와 신속하게 결합, 배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부의 직업안정 기능, 능력개발 기능,

생활안정 지원 기능을 결합한 이동출장소를 훈련기관에 상설할 필요가 있다.

4) 자격증 취득 및 학제와 연계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국가의 인적 자원 관리전략 차원에서든 당면한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든 교육훈련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 과정을 자격증 및 학점 등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교육부가 실업자 재취업교육을 시행하면서 4백 시간 이상을 이수한 중졸 실직자가 검정고시에 응시할 경우, 2001년 2월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선택과목을 면제해주는 등 학제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그 폭과 범위를 보다 전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과목과 교육훈련 이수과목을 연계시킨다든지, 학점은행제의 운영 방식과 같이 교육훈련과정에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 학위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직하다(학점 인정 공인교육훈련 프로그램 등). 이를 위해서는 물론 그동안 학력거품만 양산해온 현행 대학입시제도 자체가 대폭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향후 인적 자원의 배분이나 노동력의 수요-공급 구조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학교육 체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5) 실직자 훈련을 계기로 한 평생 능력개발 체제 구축

그동안 소품종 대량생산과 고도성장 시기의 직업훈련은 주로 단순인력의 양성에 중

점을 두어 왔다. 이로 인해 재직 기간과 실업 기간을 포함한 전 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인력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무한경쟁시대,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고실업 시대에는 재직 기간이나 실업 기간을 불문하고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직업훈련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열린 직업교육훈련,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비진학 청소년, 재직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업자를 포함한 장애인, 중고령자, 주부, 농어민 등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 생애에 걸쳐 원할 때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중추적인 교육기관인 대학이 평생능력개발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열

린 대학'들처럼 대학과 직업훈련기관, 대학 상호간,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 간에 상호학점 인정제 도입과 전문 강사·교재·시설 장비 등의 공동활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망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의 대량실업 사태를 계기로 우선적으로 실직자에 대한 열린 교육훈련망을 형성해 나간다면 곧바로 평생능력개발 체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실직자의 지속적인 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경력개발 제도를 도입해 나가야 한다. 이에 필요한 지표 개발과 함께, 교육훈련 이수 확인과 취업안내 등의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카드제의 도입, 자격 검정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윤우현/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민주노동 운동대책국장을 거쳐 현재 정책국장으로 재직중이다.